

전주매일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동동 344-21 현대대학교병원 5층 1호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7년 1월 6일 금요일 (음 12월 9일) 제1721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폐쇄 전북도민 기만 행위”

군산시, “정치권·정부차원 조치 필요” 촉구

군산시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폐쇄방침에 대해 기업과 정부의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군산시는 5일 보도자료를 통해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폐쇄는 국가정책에 기댄 대기업의 먹튀 행위로 군산시민과 전북도민이 결코 두고만 보지 않을 것”이라며 “정치권과 정부차원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군산시는 이어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초래할 현대중공업의 군사인적인 결정은 군산시민뿐만 아니라 전북도민을 기만하는 행위”라며 “정부와 현대중공업은 군산조선소 문제 해결방안을 적극 모색해 줄 것”을 촉구했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폐쇄방침으로 지역경제 초토화가 예상되는 군산시는 문동신 군산시장의 2017년 시정연설에서 말한 사이후이(死而後已)라는 사자성어로 현재 분위기를 알 수 있다.

시는 군산조선소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지난해 12월 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장병만 산업통상자원위원장, 조경태 기획재정부위원장이 군산조선소 위기극복을 위한 긴급토론회를 공동 개최해 각계의 참여 및 의견수렴을 통하여 위기 극복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또한 전북도 상공회의소협의회와 함께 범도민 100만 서명운동을 벌인 문동신 군산시장과 박정희 군산시의회의장 등은 김관영 국회의원과 전라북도 정부부지사과 지난해 12월 23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아산정책연구원(현대중공업)에 서명부를 전달하며 군산조선소 존치를 호소했다.

전북지역 국회의원들도 군산조선소 존치 운동에 나섰다.

지난해 말 김관영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동영, 유성엽 의원 등 전북지역 국회의원 10명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도크 가동중단” 관련 성명을 내고 전북정부를 파탄시킬 정부와 현대중공업의 결정은 반복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이들 국회의원들은 “정부의 공공선 발주 등 국내 조선업의 선순환을 위한 재정사업이 추경에 이어 2017년에도 예산안에 충분히 담겨있다”며 “현대중공업은 이미 방위사업청과 해양경비안전본부로부터 7000억원 규모의 사업을 수주했다”고 밝혔다.

또한 “해위수주도 이어지고 있는데 2016년 44억 달러에 이어 향후 선박

편드 등의 지원을 통한 추가수주도 예상되는 만큼 군산조선소 운영상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해를 넘긴 지금까지 누구도 현대중공업 측으로부터 어떠한 답변을 듣지 못한 상태이다.

이에 군산시와 전북도, 전법권 국회의원들은 “현대중공업이 군산조선소를 유지한 후 전북도와 군산시는 열악한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현금으로 200억 원의 투자보조금을 적극 지원했으며, 조선산업 클러스터 조성, 진입도로 건설, 인근대학 조선학과 신설 등 현대중공업 주변 인프라 구축을 위해 수백억 원을 투자했음에도 기업은 논리로 군산이 너무나 가볍게 버려졌다”고 비난했다.

현대중공업의 결정은 그동안 투자액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단순히 투자한 비용에 대한 편익에만 근거해 군산조선소 폐쇄를 결정한다면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 측면에서 결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전북도민들은 군산조선소 폐쇄에 대해 그동안 현대중공업을 응원해 온 200만 전북도민의 꿈과 희망을 묵살하고 ‘불가능은 없다’는 창업주의 불굴의 정신과 영호남의 화합의 가치는 물론 전북경제의 상실을 모두 무너뜨린 처사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군산=문정곤 기자



윤전추 청와대 행정관이 5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2차 변론에서 증인 출석하고 있다.

윤전추 “세월호 참사 당일 오전 차 머리 단정”

▶ 박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

드러난 사실에 대해선 ‘인정 세부적인 질문엔 ‘모르쇠’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한 윤전추 청와대 행정관은 청와대에서 비선실세 최순실(61·세월호 참사 당일 오전 8시 30분께 박근혜 대통령이 호출해 업무를 시작했고, 이 때 박 대통령은 간단한 메이크업과 머리손질을 마친 상태였다는 증언도 나왔다.

윤 행정관은 5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에서 “청와대에서 최순실씨를 본 적이 있다”며 “다만, 횡수가 많지는 않았던 것 같다”고 말했다.

윤 행정관은 그러면서 “보기만 했을 뿐 최씨를 관저로 데려오거나 동행한 적은 없다”고 했다. 윤 행정관은 박 대통령과 최씨가 주로 어디에서 면담을 했느냐는 국회 측 질문에도 “의상 관련해서만 같이 본 것만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윤 행정관은 의상 업무와 관련해 “처음(근무초기)에는 최씨가 들어와서 의상을 조금 도와줬다”며 “그 다음부터 일일이 지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윤 행정관은 “신사동 의상실에서

옷을 가져오는 일을 담당했다”며 “신사동 의상실에서도 최씨를 본 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윤 행정관은 “의상실에서 최씨가 골라준 옷을 가져오는 게 아니고 필요한 옷을 가져오겠다”고 설명했다.

윤 행정관은 “박 대통령이 직접 봉투에 넣어 의상대금을 줬다”며 “대금을 의상실에 전달한 뒤 따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윤 행정관은 “최근인 올(2016년) 연말에도 박 대통령의 의상대금을 전달한 적이 있다”고 덧붙였다.

윤 행정관은 펜싱 국가대표 출신이자 최씨의 측근으로 꼽힌 고영태씨도 윤 행정관에 “최순실(61·세월호 참사 당일 오전 8시 30분께 박 대통령이 호출해 업무를 했다”고 말했다. 고씨는 검찰조사에서 박 대통령의 신체사이즈를 윤 행정관으로부터 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영태씨를 아느냐”는 국회 측의 질문에 윤 행정관은 “잘 알지 못한다”고 말을 흐렸다. 국회측의 추궁이 이어지자 윤 행정관은 “단 한번도 직접 연락하거나 통화한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

세월호 당일 행적에 대해 윤 행정관은 “오전 8시30분께 박 대통령이 호출해 관저로 갔다”며 “그 이후 같이 개인적인 비공식 업무를 봤다”고 밝혔다. 윤 행정관은 “이때 박 대통령은 이미 간단한 메이크업을 했고, 머리손실도 되어 있는 상태였다”며 “단정한 머리 스타일을 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윤 비서관은 “오전 9시에 박 대통령은 관저 내 집무실에 가는 것 같았고, 보고 서류가 올라와 전달하기도 했다”며 “안봉근 비서관이 대면 보고하는 것을 목격했다” 말했다.

세월호 당일 청와대에 들어온 미용사에 대해서 윤 행정관은 “(헤어와 메이크업 담당자들) 제가 모시고 들어갔다가 모시고 나왔다”고 말했다. 또 이날 윤 행정관은 국회 측 질문에 대부분 “말씀드리기 곤란하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해 논란이 됐다.

박 대통령과 관련해 명백히 드러난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했지만, 그 사실에 대해서도 세부적으로 질문이 들어오면 ‘모르쇠’로 일관한 것이다.

이에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은 “본인이 어떤 범죄의 혐의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진술을 거부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진술을 해야 한다”며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내용도 모른 다거나 하는데 상당히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강 재판관은 “그렇지 않으면 뭔가 부정할 게 있었던 것 같은 의혹이 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 대통령의 의상대금과 관련 윤전추 청와대 행정관의 발언이 지난해 12월 고영태씨의 “최순실 4500만원 개인돈 계산” 발언과 달라 위증 논란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 /뉴스 “토·일요일 신문 쉽다.

도, 경제활동친화성 전국 2위

도내 전 시군 S·A 등급으로 상위권 차지

전북이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인정받고 있다.

전북도는 대한공회회소에서 전국 228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정도를 종합진단해 지수화한 ‘2016년 경제활동친화성 평가’에서 도내 7개 시군이 S등급에 선정됐다.

특히 남원(6위)과 장수(9위)는 전국 Top 10에 들어갔으며, 정읍, 익산, 진안, 군산, 전주가 S등급을, 나머지 7개 시군도 A등급에 선정돼 전 시군이 상위권을 차지했다.

대한상회는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지자체 간 선의의 경쟁과 적극 행정을 유도하기 위해 2014년부터 지역별

소세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체감도 조사를 하고 있다.

또 228개 지자체(226개 기초지자체, 제주, 세종시)를 대상으로 경제활동친화성 조사를 각각 실시하고 매년 말 결과를 전국 규제지도로 발표하고 있다.

경제활동 친화성 규제지도는 공장 설립, 산업단지, 유통물류 등 16개 항목, 110개 문항을 평가해 5개 등급(S-A-B-C-D)으로 구분한 후 기업환경이 좋을수록(SA등급) 따뜻한 주황색에 가깝게, 나쁠수록(C·D등급) 차가운 파란색에 가깝게 지도에 표시하고 있다.

지난해 평가결과와 비교해 살펴보면 S등급이 2015년에 2개 시군에서 7개 시군으로 늘었고, A등급은 5개

시군에서, 7개 시군으로 증가했으며, 전국 시도 평균으로는 전국 2위를 차지하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

특히 남원시는 16개 세부지표 중 10개 지표가 S등급 차지했으며, 군산시, 무주군, 익산시는 전국 순위가 100단계 이상 상승했다.

경제활동 친화성 평가에서 전라북도도 좋은 성과를 받은 것은, 도와 시군이 손을 맞잡고 기업 환경에 저해되는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풀어나온 결과이다.

대표적 규제개선사례로 도시계획위원회 동일안건 반복심의 횡수 제한, 산업단지 민간개발자 이익률 상향 조정,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등이 다. /안재용 기자

매일 INDEX
16면 - 김승환 교육감 신년 인터뷰

군산신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청정 부안의 농특산물로 소중한 분들에게 마음을 전하세요!”

대한민국 새만금 수도 부안

명품쌀 '천년의 솜씨'

부안팽주

곰소젓갈

부안고등어

어화세상
벗님네야
복받으려
마실가세

부안 마실축제

제5회

2017.5.4(목)~5.6(토)

부안마실축제에 오시면 오복이 가득합니다